MK 뉴스

인쇄하기 취 소

북한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포함 모든 연락선 차단·폐기"

기자 입력 : 2020.06.09 06:42:37 수정 : 2020.06.09 06:43:1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남북간 상시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의 업무 통화에 응답을 하지 않다가 오후에야 연락을 받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이날 정오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노동당 본부청사와 청와대와의 직통 통신(핫라인) 등 남북 당국 사이의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업무 통화 관련, 오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오후에는 돌연 연락을 받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금일(8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단)오전 연락협의(불통)에 대해 북측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신문

[사설]北, '대북 전단' 명분 파상공세...묘책 시급

경기신문 | 승인 2020.06.09 06:00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개소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두절상태에 빠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성토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파기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서는 등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북·미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사 파견 타진 등 난국 타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제1부부장은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조선당국이 막지 못한다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북남군사합의파기 등에 대해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통일부는 즉각적으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와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연일 높이던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달나라 타령'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순환 관계' 개념을 맹렬히 성토했다. 매체는 "지금까지 북남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사건건 미국에 일러바치고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악순환 관계'이지 어떻게 '선순환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순환 관계' 타령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며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쯤 되면 작금의 파상공세를 북한의 의도에 대단히 중요한 뭔가가 작정돼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읽은 게 옳을 것이다. '대북 전단'은 어제

오늘의 논란거리가 아닌 일이다. 여권 일각의 해석처럼 북한이 뭔가 중대한 변화 또는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야당을 비롯한 보수 민심의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저항을 뚫고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고조시키는 긴장이 그런 수준을 넘어서면서 해법이 한층 난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화마저 끊어버린 저들과 당장 소통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사교환 등 극적인 반전 시도를 포기해선 안 된다. 남북교류와 대화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여명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신문

NewsDigm 뉴스다임

뉴스다임 newsdigm.com

산림청,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구축

감시초소(GP) 철거지·화살머리고지 산림복원

기사입력시간 : 2020/06/08 [19:00:00] 노진환 기자

산림청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구축을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감시초소(GP) 철거지 및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 산림복원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의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조사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PFI(Peace Forest Initiative, 평화산림이니셔티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구축을 위한 감시초소(GP) 철거지·화살머리고지 산림복원 실태조사 추진 사진제공: 산림청 © 뉴스다임

주요 대상은 철원군 일대 감시초소(GP) 철거지 2개소와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 등으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산림복원 담당자 및 연구자 12명으로 구성돼 산림복원 방안과 산림생태계 조사를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인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DMZ) 일원 250ha 면적의 산림을 복원했다.

산림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산림생태복원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구축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